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만하지 말고 합의를 파기하라

▶ 관련 기사 3면



김미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기만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3면

적폐 청산 잠정 결산 3면

UAE 원전 게이트 2면

동아시아와 한반도 정세

《화염과 분노》 논란 7면

2년 만의 남북 대화 3면

2018년 동아시아 전망 6면

이란 반정부

시위와

역사적 배경

8~9면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의

창립을 축하하며

4면

현대중공업

임단협 부결과

사용자 전술

5면

심상정의

《난 네 편이야》

서평

10면

대학 청소

노동자 투쟁

11면

한동대는

성소수자·페미니즘

탄압 중단하라

5면

이명박근혜 ‘UAE 원전 게이트’ 덮어 주는 정부

김어진

한국과의 핵발전소 계약 전반을 총괄한 아랍에미리트(UAE) 행정청장 칼둔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UAE 관련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가 방한하자마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태영은 ‘국회가 동의 안 해 줄까 봐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했다고 실토했다.

‘이면합의 없다’고 잡아땀 이명박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차고 넘치는 이명박 구속 사유에 “UAE와의 비밀 군사협정 추진”이 하나 더 추가됐다. 국정조사하라며 핏대를 세웠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멈칫하는 모양새다.

현 군사협정대로라면 UAE 주둔 한국 특전사 병력(아크부대)은 UAE 동의를 얻어야 철군할 수 있다. 한 보도에 따르면 UAE 핵발전소의 핵폐기물까지 국내로 들여온다. UAE 원자력공사문건에 해외서비스공급자에게 폐연료봉 처리를 맡긴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2011년 《신동아》 4월호).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UAE와의 “잘못된 약속”을 파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국회 동의 절차가 누락된 것을 꺼림칙해 하는 정도지, 이 약속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 한다. 1월 9일 비서실장 임종석과 칼둔은 ‘한-UAE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포괄적”, “전면적”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다.

**‘이면합의 없다’고 잡아땀
이명박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차고 넘치는 이명박 구속
사유에 “UAE와의
비밀군사협정 추진”이 하나
더 추가됐다**



‘몰래’ 군사동맹의 실체가 드러나다 UAE 현지에서 군사훈련 중인 한국 특전사 부대와 UAE군

UAE와의 군사협정 계승은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아크부대는 중동 전쟁 위험에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휘말리게 될 수 있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카타르와의 단교를 주도한 대이란 강경파이고 이란 견제를 구실로 미사 일방어체계(MD)까지 배치한 대표적인 친미·친사우디아라비아 국가다. UAE는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적극 지원해 왔다. 미국은 UAE를 대이란 압박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한다.

더욱이 UAE는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의 아부무사, 토티 섬 등 석유 매장량이 많은 섬 세 곳을 놓고 영토 분쟁까지 벌이고 있다.* 급기야 사우디아라비아를 도와 예멘 내전에도 가세했

다. 기아와 전염병으로 세계 최악의 인도적 위기를 겪는 예멘에 UAE는 폭격을 퍼붓고 있다.

정의당 김중대 의원은 한국 정부가 “사우디와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했을 때 귀한 탄약 … 180억 원어치를 사우디에 반출”했다고 폭로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이 국가들의 예멘 공격을 군수지원한 셈이다!

한편,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UAE의 바라카 핵발전소를 핵심 군사 목표물로 삼아 왔다.

급기야 후티 반군이 “한국이 건설 중인 UAE 바라카 핵발전소를 향해 장거리 크루즈미사일을 발사했다.”(12월

3일 알아라비아 방송과 BBC, AP통신 등) 목표물 타격 성공 여부는 양 진영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핵발전소가 제3국의 공격을 받게 될 경우 현재로서는 아크부대가 개입하게 할 수밖에 없다. 바라카 핵발전소에만 3백여 명 이상의 한국 기술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UAE에 사는 교민만 1만여 명이 넘는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UAE와의 군사동맹을 계승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아크부대 주둔 후 UAE의 한국 무기 수입은 393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 규모로 급속하게 팽창했다. UAE에 진출한 한국 기업만 SK, 삼성물산, GS, 현대건설 등 2백여 곳

이 넘는다. 중동 부자들의 이권이 가장 활발하게 오가는 UAE에서 한국 지배자들도 잇속을 챙기려고 위험천만한 약속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UAE와의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를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 2014년 핵발전소 패키지 파병의 부당함을 알리는 반전평화연대(준) 긴급의견서에서 인용. 이 의견서는 당시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송부됐다. 의견서에는 군사협정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과 UAE 파병의 부당함에 관한 구체적 근거들이 실려 있다.<http://antiwar-textcube.blogspot.kr/>

정의당, 정당후원금 7억 원 모금 대중이 점점 진보적이 되다

김인식

정당후원금 모금에서 정의당이 12월 말 현재 7억 원을 모금했다. 민주당을 앞지른 액수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중앙당 후원회도 출범하지 못했더니 껌소금 맛이다. 물론 이 당들은 명백한 친자본주의 정당으로, 평범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정당후원금에 의존하는 정당은 아니므로 단순 비교는 무리다.

정당후원회는 2006년에 폐지됐다. 이번엔 11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2002년 대선에서 당시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이 대기업들로부터 불법적으로 823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

건이 폐지의 발미였다. 2.5톤 탑차에 1만 원권 현금을 실어 한나라당 대선 후보 이회창에게 전달했다 해서 일명 ‘차폐기’ 사건이라 불린다. 박근혜가 탄핵돼 구속돼 있는 것에서 보듯 이 당은 그때나 지금이나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정당이다.

노동조합 집단 후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같은 부르주아 정당들은 정당후원금으로 당을 운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후원회 폐지는 부패한 주류 정당들이 대중의 원성을 영뚱한 데로 돌리는 것이었다.(2002년 대선 때 노무현도 수십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

당시 정당후원회 폐지로 재정적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정당은 민주노동당이었다. 민주노동당의 주된 재정 원천은 노동조합들이 제공한 정치자금이었다.

이번엔 정의당도 노동조합들의 집단 후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자들은 전국의 노동조합들을 순회하면서 모금 활동을 했다. 산별노조나 대형 사업장 노조들의 집행부들이 정의당 후원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다고 한다.

이는 개혁이 지지부진하거나 심지어 배신까지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 대중의 불만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노동자들

의 의식이 예리하게 좌선화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말이다.

대중의 진정한 염원을 고려해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연립정부 제안 따위는 근시안적 전망일 뿐이다.

정의당이 온건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타협주의 노선(사회적 대화 같은)을 지지하면, 노동자들이 경험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며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돕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장차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대중적 실망과 불만으로 변할 때 정의당이 그 왼쪽에서 기성 정치 영역에서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이란 핵합의, 깨질 수 있다
중동 긴장을 계속 키우는
제국주의 갈등

★ 세월호 운동 3년 평가와 과제
문재인 정부와 세월호 운동

★ 한상균 사면하랬더니 이영주 구속
쫓몰에 진 빚 때리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 조치”는 기만

1월 9일에 게재된 온라인 기사의 수정 정보판이다. 수정은 교정 수준이었다.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주류 언론은 “이 합의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강경화 장관의 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뒤이어 “이 합의가 일본과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 장관(이하 강경화)이 못 박았기 때문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임을 명시했다. 이는 이후 한국 정부가 더는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 인정과 제대로 된 배상을 요구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했다. 이런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어떻게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가 이 합의를 인정하는 것은 2주 전 외교부가 직접 폭로한 박근혜 정부의 추악한 이면 합의까지 끌어안고 가겠다는 뜻이다. 합의 이전으로의 원상 회복은커녕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을 받아 내기 위한 분명



위선 말로 사과만 할 게 아니라 사과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 노력을 회피할 것임을 의미한다.

강경화는 합의를 유지하는 대신, 일본이 셸프 면죄부로 피해자들에게 쥐여주려는 10억 엔을 유보하고 이를 한국 돈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10억 엔을 거부해 온 이유는 이 돈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도장 찍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합의 파기가 당면 쟁점이지, 10억 엔을 한국 돈으로 주느냐 마느냐가 쟁점이 아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10억 엔을 유보하는 조처는 생색내기이고 꾀죄죄한 절충에 불과하다.

정부는 10억 엔으로 만든 화해·치유재단 해산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비록 당분간 10억 엔의 향방을 놓고 일본과 언쟁하는 모양새는 보이겠지만 말이다.

정부가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 날을 발표 시점으로 잡은 의도도 의심스럽다. 비판 여론을 희석하려는 의중이 있었을 것이다.

강경화는 “피해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겠다” 해놓고, 기자회견이 끝나자 질의도 안 받았다. “장관이 외교 사안에 대해 자세한 질의답변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

다”(외교부 당국자의 말)며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하 호칭 생략)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와 정부 간의 조건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겠다.” 그러나 닷새 전인 1월 5일 또 한 분의 피해자가 가슴에 한을 품은 채 돌아가셨다.(이제 서른 한 분만 남았다.) 문재인이 ‘위안부’ 피해자의 병실을 찾아 언론의 조명을 받은 다음 날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와 한일관계를 별개 문제로 다루겠다고 한다(“투 트랙”), 결국 미국 제국주의 하의 한일관계 강화를 위해 과거사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은 이면 합의가 폭로된 직후(2017년 12월 2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한미일 협력에 중요하다”고 압박했다.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뜻에 순응할수록 정부가 “계승”하려는 것이 촛불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염원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적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승주

2년 만의 남북 대화

여전히 장기적 전망은 밝지 않다

김영익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군사당국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다. 2년 만의 남북 대화였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고 이번 회담을 성사시켜야 했을 것이다. 올림픽 이후에도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 시도하려 할 것 같다.

9일 회담의 결과, 다음달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외에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응원단 등도 함께 올 것 같다. 지난해 트럼프가 말한 “화염과 분노” 같은 상황이 올해에도 지속될까 우려했던 사람들에게겐 기대감이 생길 법하다.

물론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익들은 이런 상황이 불만이다. <조선일보>는 북한의 “평창 공세” 운운하며 이번 회담을 비난했다. 이런 행태를 보면, 긴장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호전광 같다.

북한은 남북 대화에 나서면서 남한 너머의 미국을 바라볼 것이다. 트럼프가 공공연히 군사 행동을 협박하고 제재를 강화해 온 가운데, 북한이 보기에 남북 대화는 그 국면을 바꾸고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는 “징검다리”로 여겨질 수 있다. 평창으로 미국 고위급대표단이 온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비핵화

분명 미국과 북한의 공식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서로 의중을 탐색하기 위한 북·미 간 비공식 접촉은 계속됐다.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제국주의 때문에 미국이 대북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꿀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평창 올림픽에 북한 대표단도 오고 미국 대표단도 오지만, 바로 그 주변 해역에 미군 항공모함도 추가 배치될 것이다. 항공모함은 트럼프가 북한과 중국에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한국의 “일치된 대응”을 강조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 한국이 남북 대화를 하더라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보조를 맞춰야 하며 대북 제재를 약화시켜선 안 된다는 경고다.

여기에 문재인도 동의해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를 미국과 맞출 것이다.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밝혔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5·24 제재 조치 문제 등은 모두 유엔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모두 남북관계 진전 여부를 판가름할 쟁점들이다. 일부 친문 인사들이 바라는 남북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아쉽게도 “평창의 평화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일 공산이 크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에 보조를 맞추는 한, 한반도 주변 정세의 중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불안하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노력을 잠정 결산한다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의 적폐 청산 요구를 받아안을 것처럼 녀살을 피운 것이다. 그러나 실천을 보면, 문재인 정부 8개월 동안 적폐 청산은 그다지 실현되지 않았다.

물론 청산된 것들이 있긴 하다. 먼저, 박근혜 임기 중에 이미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국정교과서가 폐기됐다.

박근혜 퇴진 촛불을 촉발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특히,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의 쟁점인 성과연봉제도 노동부 지시로 중단됐다.

이명박근혜 시절에 국가기관들이 벌인 부패 행각들의 실체가 상당히 드러났다. 이명박의 개인 비리인 다스, BBK도 다시 수사 대상이 됐다.

지지부진한 것들

세월호 2기 특조위는 1기에 비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권한으로 이제야 구성 중이다.

노동부의 행정지침, 임금체계 개악 시도 등 나쁜 노동정책(개악)이 멈췄다고 보기 어렵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박근혜 노동부의 지침도 폐기되지 않고 있다.

법외노조 철회와 세월호 조사기구

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국회로(ILO 비준이나 특별법 제정 등) 미루면서 시간만 끌었거나 끌고 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경찰 고위 간부들은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 사망 원인 은폐에 함께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언론 적폐도 여전히 다. 구 여권이 심어 놓은 적폐 인사들이 여전히 보도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정권 교체를 배경으로 파업을 벌인 MBC 정도가 사장 교체 등 성과를 조금 냈다. KBS는 아직도 파업 중이고, YTN노조가 새 투쟁을 시작했다. 이 투쟁들이 잘 되길 바란다.

뒤통수를 친 것들

박근혜가 구속시킨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이 문재인이 첫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오히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이 새로 구속됐다. 민주당은 2월에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겠다고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은 정규직화 제로로 불릴 지경이다.

사드는 오히려 배치를 강행했다. 문재인이 경찰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려고 주민들을 폭행했다.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적폐를 문재인이 계승한 대표 사례다.

문재인은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세월호 유가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얘기도 듣고 사과와 해결 약속을 했다. 박근혜와는 다르게 보였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결과는 용두사미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고, 1월 4일에는 문재인이 직접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나 1월 9일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재협상은 없다”고 발표했다. 재협상(재거론)은 없다는 게 한일 위안부 합의의 알맹이였다!

촛불이 강력할 때 세월호가 인양돼 선체 조사가 시작됐는데, 정작 정권 교체 뒤에 해결된 건 없다. 해경의 적폐 인물들은 승진했고, 해수부는 유골 발견을 숨겼다. 정부 차원의 조사기구 공약도 일방 폐기됐다. 이 기구에 유가족 참가를 보장하고 검찰을 포함시켰다면 수사권·기소권 문제도 해결됐을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중단(탈원전)이 공약이었는데도, 제 할 일을 ‘사회적 대화’ 떠넘겨 공약을 사실상 파기했다. 문재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과정을 “대화하고 타협하며, 결과를 존중하는 … 촛불이 염원한 대한민국”이라고 자찬한 건 메스꺼운 위선일 뿐이다.

고뇌를 가장한 기만

최근 이명박 때 국방장관 김태영의 고백으로 한국-UAE 간 비밀 군사협력 약속의 실체가 드러났다. 굳이 따지면 헌법을 위반한 정권 차원의 범죄다. 문재인은 이 문제를 덮으려는 듯하다. 청와대 면담에서 UAE 왕세제의 특사인 칼둔은 이렇게 말했다.

“양국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가톨릭식 결혼을 했다.” 이에 문재인은 “결혼했으니 뜨겁게 사랑하자”고 화답했다. 이 문제를 덮는 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 수 없다고 한 것과 양상이 매우 비슷해 보인다.

UAE 파병 약속은 미국 패권이 흔들리며 혼돈 속에 있는 중동 지역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한국 지배계급의 시도일 수 있다.(관련 기사) 2면 “UAE 원전 게이트를 열어 주는 문재인”

문재인 정부는 아류 제국주의로서 국가 이익이 촛불의 적폐 청산 염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 셈이다. 문재인은 우파나 기업주들의 반발이 큰 문제들은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거나, 그도 아니면 고뇌를 가장해 실상은 외면하거나 배신하는 길을 택했다.

문재인은 최근 1987년 민중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보고 이 영화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나 집권 8개월의 실천을 보면 세상이(개혁으로) 바뀌냐는 질문에 회의적이게 만드는 것은 문재인 정부 자신이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어 사회를 변화시키길 바라는 건 변화를 요원하게 만드는 것이니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자본주의 역사상 모든 주요 개혁들은 노동계급이 아래로부터 투쟁하고 다른 민중이 이를 지지하는 거대한 대중 운동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김문성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의 창립을 축하하며

전교조 조합원들이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더 큰 단결로 나아갈 수 있다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장

1월 6일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이 창립했다.

수모와 차별을 견뎌 온 사람들이 마침내 저항에 나서고 스스로 조직하는 과정은 언제나 감동적이다. 그럼에도 기간제교사 노조 창립이 각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

첫째, 기간제 교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동명이 쳐져 고립감과 분노에 몸부림쳤을 텐데도, 주저앉지 않고 곳곳하게 투쟁해 나아가기로 한 것이다.

마치 문재인이 '비정규직 대통령'이라도 되는 듯한 분위기가 팽배했을 때,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서 배제됐다는 것은 '앞으로 죽 비정규직이어도 마땅한 집단'이라는 낙인과도 같았다. 임용 시험을 치르지 않은 자들이 정규 교원 되게 해 달라는 것은 후안무치한 짓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조차 비정규직을 대폭 양산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었으면서, 이제 와서 비정규직 교사의 존재가 개인 능력 탓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야말로 뻔뻔스러운 것이다.

김초원, 이지혜

실업이 늘고 교사들마저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게 된 것은 결코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경제 위기가 질질 끌고 교육보다 이윤이 우선인 체제 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체제의 옹호자들은 끊임없이 개개인을 탓한다. 개인들이 자신을 탓하며 자포자기하거나, 시험 같은 개인적인 해결책에 매달리게 만들고 싶어하다. 그들이 들이대는 '공정성'은 시장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시장은 소유와 권력 때문에 결코 공정할 수 없다.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의 출범은 기간제 교사들이 개인적인 굴종을 거부하고 집단으로 뭉쳐서 저항하겠다는 선언이다. 여러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결의로 출발한 기간제 교사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기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던 김초원, 이지혜 교사가 누구보다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의 출범을 기뻐하지 않을까.

그들의 억울함에 몰래 눈물 지었을 기간제 교사들, 쫓볼 덕택에 정권이 바뀌고도 '네 탓'이라는 외면에 두 번 울었을 수많은 기간제 교사들이 더 많이 조직되어 함께 투쟁하게 되기를 응원한다.

또,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맞서 다른 노동자 부문들과 연대를 구축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은 전보다 더 커지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창립 총회를 열고 있는 박혜성 초대 위원장과 조합원들

몇 개월 전에만 해도,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기간제 교사를 비롯해 한층에 불과한 듯이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정규직 전환 방안도 너무 불충분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시발길

둘째, 기간제교사 노조 창립이 각별하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서 기간제 교사들을 배제했을 때 기간제 교사들은 기존 교직원노동조합인 전교조로부터 방어받지 못했다. 전교조 지도부는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지지하지 않음을 밝혔다.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공격을 받을 때 노동조합이 방어막이 돼 주지 않으면 홀로 싸우기가 매우 힘들다. 심지어 기존 노동조합 지도부가 은근히 지원을 회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지하지 않겠

다고 솔직하게 밝히고 나서면, 노동자들의 저항은 그야말로 가시발길이 된다.

사실, 근래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적잖이 이런 경험을 해 왔다. 최근에는 금속노조 산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 이 노동자들이 인소싱 반대 투쟁을 하는 동안 한국지엠 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이들의 요구를 정면 거슬러 사측과 인소싱을 합의한 것이다. 인소싱은 공정을 내부화하면서 거기서 일하던 비정규직을 내쫓는 것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층 어려워진 조건에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들 가운데서도 좌파라는 전교조 지도부가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지지하지 않은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전교조 지도부가 이런 입장을 취하자, 다른 많은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정당들도 기간제 교사들에게 연대 표명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전교조 지도부를 모욕하는 일이 될까 봐 말이다.

이런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기간제 교사들은 스스로 일어나 투쟁을 시작하고 조직화에 나선 것이다.

또 하나의 교원노조, 분열인가?

어떤 사람들은 기간제 교사들의 연원을 이해하면서도, 전교조와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최선인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특히 전교조 조합원들은 내심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조 안에서 단결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별개의 노조를 만드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기존 노조가 특정 집단(가령 비정규직이나 이주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거나 그들의 요구를 받아안지 않을 때다.

어떤 사람들은 전교조 안에서 기간제 교사 위원회를 만들어 기간제 교사들을 조직하자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연원을 외면하는 조직에 누가 가입하려 하겠는가? 요구는 지지해 주지 않으면서 조합비만 내라는 말로 들리기 십상이다. 또, 기간제 교사들의 요구를 지지해 투쟁하지 않을 것이라면 조직화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 전국 기간제 교사 조직의 힘을 빼려는 것으로나 보이기 십상이다.

또 하나의 교원노조가 만들어진 것이 분열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불가피성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그것이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다. 그것을 통해서만 기간제 교사들이 결의를 다지고 투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크고 단일한 교원노조를 이루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의 잘못은 아니다. 만약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면서 그들과 함께 투쟁했다면,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대거 총원하면서 더 크고 활력 있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친 것은 전교조다.(물론 언젠가 기회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가 "모든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라는 '과도한' 요구를 제출해 상황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책임 전가다. 전교조 지도부가 비정규직 교·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정부에 요구하면 되는, 복잡할 것도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전교조 지도부가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처음 내부 문자로 공지했던 지난해 6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방안과 범위는 쟁점도 되지 않았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설사 단일한 교원노조를 이루지 못한 것이 아쉽더라도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 폐지를 지지하는 한편, 전교조 자체의 요구들을 위해서도 투쟁해야 한다. 두 과제는 서로 연결돼 있다. 같은 계급의 다른 부분에 연대하는 것은 자기 부분의 건강성과도 연관돼 있다.

이미 전교조의 일부 선진적 조합원들은 전교조의 공식 입장과 관계없이 기간제 교사들을 물심양면 지지해 왔다. 서로 다른 노조 속에 있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사들의 연대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부르주아적 '정의'가 아니라 계급투쟁이 노동자들의 희망이다.



기간제교사의정규직화를지지하는공대위가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2016년 12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노동자 집회 모습이다.

지난 몇 년간 구조조정에 맞서 싸워 온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이들은 잠정합의안보다 나은 조건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잠정합의를 거부하다

김지태

지난 9일 현대중공업지부 임단협 찬반투표에서 조합원들(조선·해양플랜트 부문)이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투표 결과는 낮은 임금, 상여금 분할 지급(최저임금 인상 회피용), 성과급 차등 지급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 줬다. [관련 기사: 본지 234호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 “이거 받으려고 2년을 싸운 게 아닙니다. 부결시켜야 합니다”’]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킨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은 전체 조합원의 81퍼센트를 차지한다. 찬반투표를 분사화면 기업별로 따로 한 결과, 나머지 부문(일렉트릭, 건설기계, 로보틱스)에서는 가결됐다. 그러나 두 번째로 조합원 수가 많은 일렉트릭(전체의 11.9퍼센트)에서도 반대가 42.3퍼센트나 나왔다.

조선·해양플랜트 부문과 분할 기업별 투표 결과를 다 합치면, 투표자의 과반 이상인 52.6퍼센트가 잠정합의안에 반대한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 2년간 구조조정으로 고통을 당해 왔고 임단협 체결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노동자들 과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낮은 임금 인상과 여러 개약안을 순순히 받을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여기에는 일부 대의원과 활동가들의 부결 선동이 한 몫을 했다. 일부는 유인물을 내서 출근·점심 홍보전을 했다. 조선 부문의 한 노조 분과장은 조합원들을 모아 부결을 호소하는 설명회를 하기도 했다.

이간질에 맞서기

이번 잠정합의는 분리 교섭이 노동자들의 단결을 해칠 수 있다는 것도 보여 줬다.

사측은 기업별 성과급 차등 지급으로 노동자들 사이에 성과 경쟁을 부추기고 분열을 조장하려 했다.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은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의 성과급은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됐다. 조선·해양플랜트 부문 노동자들의 불만이 크게 터져 나온 이유다.

일렉트릭은 이번에 상대적으로 성과급이 높았지만, 노동자들은 앞으로 일감이 줄어 구조조정이 확대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그래서 일렉트릭의 일부 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지부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기업 분할 직후 현대중공업지부가 하나의 노조를 강조하며 통합 교섭을 요구했던 것은 옳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중공업지부 지도부는 사측이 통합 교섭을 거부하자 분리 교섭을 추진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그리고 마침내 차등 성과급 지급을 합의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조로 단결하려고 급속노조에 가입했던 취지를 떠올려 보면 아쉬운 후퇴였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사용자들은 어떻게든 노동자들을 갈라치

기 해 투쟁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조선업 사용자들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해 온 것도 이런 효과를 봤다. 사측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이에서도 기업 분할을 근거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잠정합의 부결은 사용자들의 조건 하락 강요와 분열 조장을 거부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이 만만찮게 투쟁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다.

이 부문은 현대중공업지부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그동안의 투쟁에서도 주력 부대였다. 따라서 조선·해양플랜트 투쟁은 나머지 분할 기업 노동자들도 투쟁으로 이끌 수 있는 중심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현대중공업(조선·해양플랜트 부문) 노동자들이 성과급 수준을 높이고 상여금 분할 지급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면, 그것은 분할 기업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에는 분할 기업의 성과급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일렉트릭 사장이 올해 발주 물량이 감소될 수 있다고 노동자들을 압박한 것, 건설기계에서도 매각설이 끊이지 않고 있고 수출 감소로 강제 휴업을 했던 것 등을 보면 말이다.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의 저임금은 다른 부문의 임금을 억제하는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찬반투표 이후 노조 지도부는 잠정합의가 부결된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의 재교섭을 요구하고 집중 투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투사들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지금의 기회를 이용해 투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노동자들을 이간시켜 분열케 하려는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장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정기적으로 《한국경제 보고서》를 내어 구조조정이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충고한다.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데 성공한 세계적 사례를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2016년에 발행한 보고서에서 OECD는 “고용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 보호”를 유지하려는 잘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하는 아비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것은 노동자 일부를 먼저 공격하는 “이원적 접근”이다.

“고용 보호 완화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한 가지 해결 방안은 신규 직원에게는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기존 직원에게는 현행 고용 보호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OECD는 “이와 같은 이원적 접근은 일부 남유럽 국가들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의기양양해 한다.

최근 현대중공업이 근속연수가 짧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려 한 것은 바로 OECD가 권고한 “이원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사측은 상여금의 일부를 월별로 쪼개 지급하려 하는데, 그러면 근속연수가 낮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억제된다.

독에 구멍 내기

“이원적 접근”의 단기 목적은 일단 고용이나 임금 공격의 교두보를 놓는 것이다. 근속 연수가 상대적으로 긴 노동자들이 이런 공격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겨 보아넘기도록 만들으로써 말이다.

그러나 “이원적 접근”의 최종 목적은 **조그만 구멍이 독 전체를 무너뜨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도입한 이중임금제를 살펴보면, 일부 노동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면 틀림없이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자동차노조 UAW의 지도부는 2007년 신입사원의 임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이중임금제 도입에 합의했다. 지도부는 그것이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지키는 불가피한 타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중임금제를 도입한 사측은 그다음에는 몇 년에 걸쳐 고임금 노동자들 다수를 공장에서 내보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반값 임금이 적용되는 저임금층 노동자 비중이 시나브로 늘었고, 고임금층 노동자들도 복지나 임금 동결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분할한 기업별로(현대중공업을 4개로 분할했다)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각개격파하려는 고전적 수법이다.

전에는 하나의 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갈갈이 찢어, 분할된 기업의 ‘성과’에 종속시키고 실적 경쟁과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력을 쪼개 하려는 것이다.**

차등적 성과급이 노동자들의 투쟁력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대표 사례는 영국 광원 파업이다. 1972년 20만 명 넘게 참가한 광원 파업은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12년 뒤인 1984~85년 파업에서는 광원들은 심각한 패배를 맞았다.

교훈

1972년 파업에는 모든 탄광의 광원들이 참가했고 연대가 흘러넘쳤다. 반면 1984~85년에는 광원들 자신이 분열해 일부 탄광들에서 작업이 계속됐다. 1977년 노동당 정부가 작정을 하고 도입한 탄광별 차등 성과급이 광원 간 임금 격차를 높이고 분열을 낳은 주된 요인이었다.

물론 광원들 자신은 이런 제도의 도입을 원하지 않았다. 채산량이 높은 탄광의 광원이 높은 성과급을 받고 채산량이 적은 탄광의 광원이 낮은 성과급을 받는 임금체계는 노동자들을 갈갈이 찢어놓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국 석탄공사와 광원노조 지도부가 잠정 합의안을 가져왔을 때 광원노조 조합원들은 이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그러자 정부는 차등 성과급에 찬성하는 노동자는 차등 성과급을 받고, 반대하는 노동자는 반지 말라고 했다. 노조 지도부는 노동조합 규약을 개정하고 투표를 다시 실시했다. 노동자들이 이번에도 이를 부결시키자, 노조 지도부는 아예 성과급 협상을 지역별로 맺도록 만들었다.

위의 두 사례가 주는 교훈을 돌아보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노사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완전히 옳았다. 근속연수가 짧은 노동자들에 대한 우선 공격과 차등 성과급은 모두 노동자들을 각개격파하려는 **사용자의 아비한 이간질 전술**이다.

그러나 두 사례는 또한 사용자들이 매우 끈질기고 단호하게 이간질 전술을 추진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에 맞서려면 노동자들도 끈질기고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

전투적 조합원들은 잠정합의 부결을 통해 드러난 노동자들의 큰 불만을 받아안고 잘 조직해 단호하게 투쟁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 노동조합 지도부에게도 거듭 부적절하게 타협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압력을 아래로부터 가할 수 있다.



사진은 2016년 12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노동자 집회 모습이다.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갈등과 한반도 정세

올해도 불안정이 커질 것이다. 평화 운동이 구축돼야 한다

김영익

새해 벽두에 책 한 권이 깜짝 놀랄 기세로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기자인지 개그맨인지 모호한 자”라고 평한 마이클 울프가 쓴 《화염과 분노》가 바로 그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폭로가 대부분 진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허둥지둥하는 백악관의 모습은 이 믿음을 키워 주고 있다. 그만큼 트럼프 정부 안팎의 난맥상과 이진투구가 심한 것이다. 겨우 집권 1년 만에 말이다. 미국 공식 정치는 워터게이트 사건 이래 가장 큰 혼란에 빠진 듯하다.

이 책은 ‘러시아 게이트’ 조사로 트럼프가 공격받는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 권력층의 주류는 러시아에 접근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를 견제하고자 ‘러시아 게이트’를 물고 늘어져 왔다.

트럼프 측 고위 인사들이 대선 때 러시아와 접촉한 것이 “반역적”이라는 배년의 인터뷰가 실린 《화염과 분노》는 트럼프의 처지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본지는 1년 전, 트럼프 집권이 국제정세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낳으리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미국 권력층 내 갈등도 더욱 첨예해질 수 있다고 봤다.

그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미국 공식 정치의 위기와 (특히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갈등이 맞물리면서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갈등과 긴장이 다시 증폭될 수 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은 — 각자의 근거는 다를지라도 —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이 너무 유약해 미국 패권의 상대적 약화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본다.



“경쟁적 세계”에서 도전자들을 누르고 패권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트럼프의 백악관과 내각에 군장성 출신이 1945년 이래 가장 많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해야 한다.

오바마는 제국주의 체제 속에서 미국의 상대적 지위 하락을 막으려고 애썼다. 특히,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동맹을 확대하고, 다자 무역협정 등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는 정교하게 고안된 조치들을 실행해 왔다.

도전들

그러나 미국은 곳곳에서 거의 동시에 제기되는 도전들(우크라이나, 중동 상황의 악화 등)에 직면했고, 오바마는 중국 등이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다. 예컨대 30년 전에는 미국 군비가 중국보다 30배 많았

다. 그러나 이 격차는 점차 줄고 있다. 2000년에는 중국의 군비 지출이 미국의 10분의 1로 좁혀지고, 2016년 현재 이 격차는 3분의 1로 됐다.

많은 문제에서 번덕스런 행태를 보이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대외정책이 오바마의 대외 정책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려 해 왔다.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 제고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핵 합의를 뒤집겠다고 공언했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 밀착하며 ‘예루살렘 수도 인정’ 같은 공세적 조치를 내놓았다.

지난달에 나온 트럼프의 새 국가안보전략은 미국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경쟁자들을 누르겠다는 노골적인 말로 가득하다. 러

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지목됐다.

이 국가안보전략 문서를 읽다 보면, 미국이 여전히 가장 강력한 국가이지만 이제 더는 경제와 군사 모두에서 다른 자본주의 강대국들을 압도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위기 의식이 엿보인다.

많은 미국 권력자들이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 온 자유시장 자본주의 국제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트럼프를 여전히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트럼프가 미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훼손할까 봐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트럼프는 자신이 국익을 위한 확실한 선택임을 보이려 애쓸 것이다. 세계가 더 위험해지더라도 말이다.

한반도의 미래도 녹록치 않다

트럼프 집권 이후 지난해 가장 긴장이 치솟았던 곳은 바로 한반도였다. 울프의 책 제목이 괜히 《화염과 분노》인 게 아니다.

북한은 트럼프 집권 후에도 미국의 “악의적 무시”와 대북 압박 기조가 지속되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수소 폭탄 실험을 감행했다.

제국주의적 갈등이 첨예해진 상황에서 트럼프는 매우 험악한 말과 군사적 위협을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을 한껏 높였다. 거기에 자원 수출, 금융 등을 옥죄는 대북 경제 제재 강화를 결합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제국주의적 경쟁을 위해 북한 핵을 발미로 북한을 압박해 왔다. 그런 경쟁과 갈등이 악화된다면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게 된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대북 군사 옵션을 검토해 오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밝혀 왔다. 얼마 전 브루킹스 연구소는 한 보고서에서 미사일 요격, 항구 봉쇄, 핵시설 타격, 김정은 제거 등 미국이 할 수 있는 대북 군사 옵션을 검토했다. 그러면서, 대북 군사 옵션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자들이 트럼프 정부 외에도 미국 정치권에 더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 옵션

물론 그 보고서는 군사 옵션이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동시에 지적했다. 그러나 이렇게 긴장과 갈등이 누적되면 예기치 않은 사태 전개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그러면 지배자들은 어느새 전쟁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유화 국면이 간헐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갈등 상황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유화 국면은 지속가능한 합의나 평화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요행을 바랄 수는 없다. 올해 한반도 불안정 상황을 주시하며, 한반도 평화운동을 건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훗날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참담한 비극을 막기 위해 싸울 수 있다.

“진짜 적은 중국”이라는 트럼프 정부

《화염과 분노》를 보면 트럼프의 수석 전략가를 지낸 스티브 배년이 사석에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러시아인들은 나쁜 녀석들이지. 그러나 세계는 나쁜 녀석들로 가득해.”

“중국이 제일 문제야.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중국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다른 것도 다룰 수 없어.”

중국은 미국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틈을 파고들어 국위를 크게 높인 국가다. 그리고 ‘일대일로’ 구상을 펼치면서 유라시아 곳곳으로 자국 영향력의 지리적 경계를 크게 확장하려 한다.

트럼프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명시하며 동맹을 결집시키겠다고 밝힌 데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일본

이 뒷받침해 줄 것이다. 올해 일본에서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듯한데, 이와 동시에 아베는 중국을 견제할 외교적·군사적 수단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트럼프 정부 안에서 피터 나바로, 윌버 로스 같은 인물들은 기존의 신자유주의 어젠다를 거슬러, 미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중국을 상대로 무역 보복 조치를 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여전히 내고 있다.

이런 생각은 국가안보전략에도 반영돼 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정책은 경쟁자들을 국제 기구와 무역으로 끌어들이고 그들과 협력하면 그들이 우호적이고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런 가정은 틀렸음이 드러났다.”

중국은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기존 대외정책이 흔들리는 틈에 지정학

적 판세를 자국에 유리하게 가져가려 해 왔다. 예컨대 최근 트럼프 정부가 파키스탄이 이슬람 테러범들을 지원한다며 원조 제공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바로 파키스탄에 손을 뻗어 파키스탄 남단에 중국 해·공군 기지를 짓기로 합의했다.

또, 트럼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자 중국은 반색하며 아시아에서 새로운 무역질서를 주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자극받아 동아시아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군비를 늘려 왔다. 그런 국가들 중에는 대만·베트남·호주처럼 중국과 경제적 관계가 깊으면서도 중국의 확장을 경계하는 국가가 많다.

지난해 6월 호주 총리 턴불은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을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강압적인 중국은 자율권과

전략적 공간을 빼앗긴 이웃들의 분노 섞인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런 점을 활용해 아시아 국가들에 파고들어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포위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기존 합의(예컨대 ‘하나의 중국’ 원칙)를 정말로 파기할 수도 있다.

지난해 미국 군함이 대만 항구에 정례적으로 기항할 것을 미국 의회가 권고하려 했다. 그러자 미국 주재 중국 공사는 그런 조치의 실행은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올해도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은 점증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으로 남중국해, 대만 등지에서 예기치 않은 긴장 사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동아시아는 트럼프가 선언한 “경쟁의 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돼 버렸다.

트럼프를 때리는 《화염과 분노》, ‘러시아 스캔들’ ...

추악한 난맥상과 이진투구의 이면

김준효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그 주변 인사들의 난맥상을 폭로한 마이클 울프의 신간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가 장안의 화제다. 트럼프 측 변호사가 이 책을 출판하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트럼프 자신도 트위터로 비난을 퍼붓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책은 주목을 더 끌었다. 예정일을 앞당겨 발간된 이 책은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다.

저자가 트럼프 측의 초청을 받아 관련 인사들과 200회 이상 인터뷰한 후 썼다는 이 책은, 트럼프와 그 주변 인사들의 작태를 소상히 폭로해 화제가 됐다.

이 책은 트럼프를 “하겐다즈 바닐라 아이스크림 통을 문지르며 여러 사안들에 아무 말이나 던지는” 덩치 큰 어린애로, 그 주변 인사들을 트럼프가 낙선(!)하면 대선 캠프 경력으로 한발천 잡아 보려던 협잡꾼들로 묘사했다.

트럼프가 출마한 것은 낙선한 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돼 TV 쇼를 만들 때 광고 효과를 누릴 생각에서였고, 트럼프의 아내 멜라니가 당선 소식에 울음을 터뜨린 것은 “기뻐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출마 전에 약속했던 낙선과 그 이후의 사치스런 삶이라는 미래가 날아갔기 때문이었다는 식이다.

정말이지 “이 책에 실린 얘기가 절반만 사실이라도, 역대 정부 중 가장 혼돈스러운 트럼프 정부의 작태를 생생히 보여 주는 책”이라는 현지 언론의 평이 전혀 무색하지 않다.

이 책은 트럼프 취임 거의 직후부터 이어진 ‘러시아 스캔들’ 수사 와중에 발간됐다.[관련 기사: 본지 232호 ‘특검 수사가 트럼프 턱밑으로 좁혀 오다’] 선거 운동 시절 트럼프 선거운동본부 주요 인사들이 러시아 정부에게서 자금과 정보 지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시작된 이 수사는, 이미 본부 주요 인사들이 기소되고 트럼프의 장남과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는 데까지 나아갔다.

심지어 최근 특별검사 로버트 무러는 트럼프를 직접 심문하겠다고 나섰다. 《화염과 분노》가 출간돼 트럼프의 장남과 사위가 “반역적”이고 “비애국적”이며 “나쁜 짓”을 했다는 (트럼프의 전 수석 전략관 스티브 배넌의) 말이 퍼진 직후의 일이다.

울프는,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의 압도 다수는 트럼프가 낙선할 것이라 믿고 “반역” 문제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스캔들이 “트럼프를 거꾸러뜨릴 결정적 한 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책에 실린 구절 때문에 트럼프에게 맹비난당한 배넌이 출간 나흘 만에 해당 표현은 “[이미 기소된] 폴 매너포트를 두고 한 말”이라며 얼버무렸지만, 사정이 나아지지는 않았다.

《화염과 분노》출간 후 미국 기성 언론들은 트럼프의 정신질환 여부를 초점 삼아 선정적 보도를 쏟아 냈다. 미국 기성 정치에서 추문 폭로는 흔한 일이지만, 초선 대통령 임기 첫해부터 추문 폭로가 이토록 선풍적인 것은 유례



사진 출처: Cage Skidmore

이런 자가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끌며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

가 드물다. 이는 자객 미달의 인물(트럼프)이 러시아와의 ‘내통’으로 대통령이 돼 국내에서 통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세계에서 미국 주도 헤게모니를 위협롭게 한다고 미국 지배계급 상당수가 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통치 정당성?

트럼프는 경제 위기 속에서 광범해진 분노와 기성 정치·대기업 거부 정서에 힘입어 부상했다. 트럼프는 인종 차별·성차별을 무기 삼아 기성 정치권 밖에서 지지를 모았다.(노골적인 우익 포퓰리스트 스티브 배넌 같은 자들) 유럽에서 극우의 성장을 불러온 정치적 양극화[관련 기사: 본지 234호 ‘유럽 우익의 위험’]가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오른쪽 결집점 삼아 벌어졌고(왼쪽 결집점은 버니 샌더스[관련 기사: 본지 167호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샌더스 열풍’]), 마침내 트럼프는 지배계급 다수가 지지한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당선했다.(물론 투표율은 매우 낮았다.)

이들은 소수자를 희생양 삼아서라도 미국 자본주의를 부흥시키겠다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나섰다. 트

럼프는 당선 후 1년 동안 이 말의 참 뜻을 보여 줬는데, 그것은 미국이 자국 자본의 승리를 위해 아낌 없이 힘을 쓰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잠재적) 경쟁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 자체만 놓고 보면 미국 지배계급의 열망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 지배계급이 수십 년 동안 주의 깊게 구성해 온 전략의 버팀목 일부를 흔들 수도 있는 방향을 기웃거리기도 했다.(트럼프와 그 이데올로기적 측근들의 기반이 미국 지배층 주류와 이질적인 것이 그런 ‘일탈’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듯하다.)

트럼프 정부 안에는 배넌 같은 극우 포퓰리스트부터 그보다나 전통적 지배층에 가까운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데, 울프는 서로 으르렁거리는 이들 간 공통점은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상황에서 잠재적 경쟁자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우려는 지배층 다수가 공유하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때로 다른 경쟁자(특히 러시아)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예컨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이유로 오바마와 유럽이 힘을 합쳐 러시아에 가한 경제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는 말을 흘리는 식이었다.

이는 서유럽을 규합해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한다는 냉전 이래 미국 지배계급의 전통적 대(對) 유라시아 전략 기조와는 이질적인 것이다. 트럼프의 추문이 (거의 공공연히 시인한) 성추행 혐의가 아니라) 다름 아닌 ‘러시아 스캔들’로 터져 나오고, 수십 년 동안 러시아와 겨뤘던 공안 기구들이 정권 수반의 추문 폭로에 앞장선 배경이다.(전 대통령 빌 클린턴의 스캔들이 외도 혐의를 두고 터진 것과 견줘 보라.)

이런 우려는 트럼프가 당선 직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중단

을 선언하고 최근 이란과의 핵 합의를 불인정하는 등 오바마 정부가 주의 깊게 펼친 전술들을 해집은 것 때문에도 키워진 듯하다. “멍청이” 트럼프가 가뜩이나 불안정한 유라시아 질서를 흔들어 장기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불러올까 두렵기도 했을 것이다.

한편 트럼프가 국내에서도 퍼는 인종 차별적 정책들도 미국 지배자들 모두의 입맛에 꼭 맞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특정 국가에서 온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고(멕시코 정부와 관계를 악화시키면 서까지) 멕시코 이주민에 가혹한 차별을 가하는 등의 일부 정책은 해외 노동력 유입으로 이득을 얻는 일부 자본가들에게는 마뜩찮은 일이었다.(세계 최대 규모 기업들이 주도하는 정부 정책 규탄 시위들이 간간히 벌어진 배경이다)

긴장과 동거

이처럼 트럼프 정부 안팎의 이진투구는 미국의 대외정책, 그리고 그와 긴밀히 연결된 국내정책을 놓고 형성된 긴장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 갈등을 철천지 원수 사이의 화해 불가능한 적대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은 미국 자본주의의 성장과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자들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평범한 노동자 대중의 안전과 복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점도 서로 **꼭 마찬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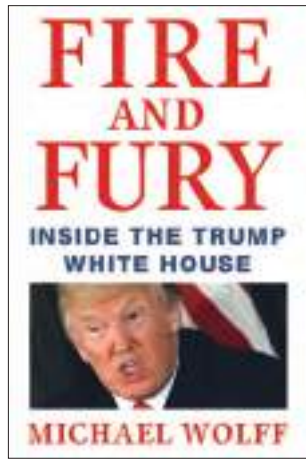
당장 《화염과 분노》출간 1주일만 해도 트럼프는 30년래 최대폭의 부자 감세안의 상원 통과를 두고 국회의원들과 덕담을 주고받았다.[관련 기사: 본지 232호 ‘트럼프의 세계 개편’] 상·하원협의회가 국방비 대폭 증액을 골자로 하는 국방수권법에 합의한 것, 2017년 말 발표된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함께 주요 경쟁자로 지정한 것 등을 보면,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위해서는 주저 없이 경제적·정치적·군사적 힘을 동원할 수 있다는 기조 하에 얼마든지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민주당 친화적인 미국 일부 언론들과 정재계 인사들은 트럼프를 정신병자·멍청이라 모욕하며 자신들이 “트럼프에 맞서 저항한다”고 자찬한다. 그러나 위의 법안들이 합의·통과된 것은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민주당 일각을 비롯한 미국 자유주의자들이 트럼프 개인을 손가락질하며 그의 당선을 ‘러시아 스캔들’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서민에 전가했던 기성 정치권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날이 새롭게 폭로되는 트럼프와 그 무리들의 추악함을 진정 몰아내려면, 인종차별·성차별·부익부 빈익빈 조장 등 그들이 대변하는 모든 것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필요하다.

특히 남한에 사는 우리는, 자칭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저런 자들과 손 잡고 동아시아에서 긴장을 부채질하는 데에도 단호히 반대해야 할 것이다.



Q 《화염과 분노》에서 폭로된 트럼프 무리들의 천태만상

“뭐 이런 멍청이가 다 있어!”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 화가 치밀어 트럼프와의 통화를 끊으며

“트럼프가 자기 공약을 이해하긴 하나?”

우파 언론 (폭스뉴스) CEO 로저 아일스, 트럼프 당선 축하 만찬에서 던진 질문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심한 응석받이다. 그에게는 매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을 투성이다.”

백악관 비서실 전 부실장 케이티 월시

“그러게요, 그 얘기를 [당선 전에] 미리 해 둘 걸 그랬어요.”

재러드 쿠슈너, 새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묻는 월시의 질문에 답하며

“인수위 시절에 배넌은 [백악관 선임보좌관] 스테판 밀러한테 행정명령 초안 쓰는 법을 인터넷 검색으로 배우라고 했다. ... [밀러는] 제대로 된 영어 문장을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마틴 울프가 폭로한 트럼프 측근의 실상

“당선 첫날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다.”

백악관 전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

“떨거지들이 공황에 나타나 폭동을 벌이라고.”

스티브 배넌, 임기 시작과 동시에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유를 묻자

“혼돈이야말로 배넌의 전략이었다.”

케이티 월시, 배넌을 평하며

이란 사회주의자들이 말한다

무엇이 시위를 촉발했으며, 이번 시위는 왜 중요한가?

12월 말부터 이란 거리에서 시위가 터져 나왔다. 사회의 가장 가난한 집단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 실업, 부패에 맞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란 사회주의자 두 명, **니마 술탄자데**와 **마수드(가명)**가 시위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이란 저항에서 이번 시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말한다.

시위는 어떻게 시작됐고, 시위를 고무하는 것은 무엇인가?

니마 최초의 시위는 마슈하드에서 시작됐는데,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클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도시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를 약화시키고 싶어 한 보수 강경파가 [시위를] 시작했다.

강경파들은 정부의 경제 정책이 빈곤층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이슬람 공화국 성립 이래 항상 써먹은 포퓰리즘적 수사를 사용했다. 하지만 분노를 표출할 구멍을 찾던 사람들이 강경파의 조그마한 시위를 곧장 파고들었다.

그래서 시위는 더 커졌고,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와 로하니 대통령을 겨냥한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후 시위는 거의 70여 개 도시로 번졌는데, 대부분 수도권에서 떨어진 지역이다.

마수드 시위의 근간에는 경제 상황에 대한 매우 광범한 불만이 있다. 물가가 올랐고, 몇몇 금융기관이 파산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환멸과 미래에 대한 비관이 널리 퍼져 있다.

테헤란 대학교 학생들은 “빵, 노동, 자유”를 연호했다. 청년들은 불안감을 느낀다.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아버지와 형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며 착잡해 한다.

지금의 거대한 시위 이전에도 이란에서는 금융기관 부도로 돈을 잃었거나, 주택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거의 매주 시위를 벌였다. 파업도 벌어졌다. 지금의 운동은 이러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구호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누가 시위하고 있는가?

니마 하층계급 사람들이 거리에 나왔고, 그중에서도 특히 소외된 집단이 나왔다. 정말이지 잊혀진 자들의 시위다. 주로 실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위가 대체로 소도시에서 벌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테헤란에서의 시위는 아직 규모가 상당히 작다.

시위의 근간에는 20대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 실업률이 공식적으로 30퍼센트가량이나 되기 때문이다. 일부 소도시에서는 50퍼센트도 넘는다.

게다가 소도시에서는 테헤란과 달리 비공식 부문 일자리를 찾을 기회도 없다. 기댔 구석이 더 없는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도 있다. 농업은 가뭄에 시달려 왔다. 이 모든 것이 작용해 불만은 곧바로 정치권을 향했고, 정부와 최고 지도자를 겨냥하게 됐다.

12월 말에 발표된 예산안을 보면 상당 부분이 보수파, 종교 지도자들과 연계된 기관들로 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저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돈을 버는가?” 하고 구호를 외친다.

사람들은 또한 왜 시리아와의 전쟁에 돈을 쓰는지 묻는다. 이는 그렇게 나쁜 구호만은 아니며, 일종의 반전·국제주의적인 구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반(反)아랍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이란은 아랍어가 아니라 페르시아어를 사용하고 국민 다수는 조상이 아랍인이 아니다.] “우리는 가자도, 레바논도 아닌 이란에 목숨을 바친다” 같은 구호에 반영돼 있다. 하지만 “가자와 이란은 함께한다. 어디서든 억압자에 죽음을” 같은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다.*

마수드 녹색운동과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의 운동은 지배자들 또는 그 내부 파벌들과 연계돼 있지 않다.

Q 용어설명

가자, 레바논

이란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무장 정파가 있는 곳이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 레바논에는 헤즈볼라가 있다.



현 정부는 서방의 경제 제재 해제로 경제가 성장했다고 자랑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빈곤율은 되레 늘었다

여태까지의 시위는 정권의 파벌인 소위 개혁파가 이끌었다. 그들은 시위가 급진화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제 구호가 극도로 과격해졌다. “이슬람 공화국을 타도하라.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로하니에게 죽음을.”

개혁주의자들이 이 운동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부는 무척 뻔뻔스럽게도 운동을 탄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자신들만의 목적을 위해 시위를 지지하고 있다. 좌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마수드 이란 정권은 지금의 운동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정복고주의자들 탓에 일어난 것인 양 하려 한다.

물론 미국 제국주의, 사우디아라비아와 기타 이란의 경쟁국들이 지금 상황을 이용하려 든다. 하지만 그들이 운동을 통제한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운동은 완전히 자생적이다.

이란 정권이 미국 제국주의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와 대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동계급이 고유의 요구를 내걸고 싸우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좌파가 지금의 시위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우파가 운동에 영향을 끼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다.

지금 투쟁에 나서는 사람들은 진정 노동계급의 구성원들이다. 좌파가 이들에 대해 침묵하거나 수상쩍다고 여기면, 그들은 부르주아 야당과 제국주의자들에게 기대를 걸 것이다.

이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좌파 운동이나 좌파 정당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파에 기댈 것이다. 이는 중동에서 흔히 일어난 일이고 운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니마 좌파는 거리에 나온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하지만, 제국주의의 구실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해야 한다.

트럼프가 시위를 지지하겠다고 나선 것에 역겨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트럼프는 이란인들의 친구가 아니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독재자들은 민주주의, 여성의 권리 등을 원하는 사람들 편에 설 도덕적 권위가 없다.

미국은 이란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부하거나 치료를 받으러 미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제약을 받고 있다.

이란 국내에서도 미국이 가한 경제 제재 때문에 의약품 가격이 상승했다. 제재는 이란 경제와 대다수 사람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줬다.

물가가 올랐고 실업률도 올랐다. 많은 산업이 파산했다.

오히려 미국의 지지는 이란 보수파가 ‘외세가 시위를 주도한다’고 주장할 구실을 제공해 시위대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란인 다수는 이란 독립에 강한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1979년] 이란 혁명은 이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란인들은

배경 체크

1979년 이란 혁명부터 최근까지의 역사

이란의 위기는 뿌리 깊다. 위기의 근본 원인은 1979년 이란 혁명의 결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혁명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미국의 주요 동맹이자 독재자였던 이란의 샤 정부를 타도했다. 샤가 지배하는 이란 사회는 매우 불평등했다. 극심한 빈곤층과 엄청난 부유층이 공존했다.

하지만 1977년 경기침체로 인해 수많은 빈민가 주민들이 샤에 맞선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시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 반란으로 발전해서 파업이 벌어지고 노동자 평의회가 등장하고 봉기가 일어났다.

그러나 혁명의 지도력을 두고 정치 투쟁이 벌어졌다. 이란 중간계급을 대변하는 성직자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국가 원수를 자칭했다.

호메이니는 노동자 평의회를 반대했다. 대신 미국에 맞서기 위해 계급을 가로지르는 “민족 단결”을 요구했다. 이란의 좌파들은 대체로 이에 동조했다. 그렇지 않은 좌파들은 살해됐다.

샤가 타도되자 제국주의는 타격을 입었지만 그에 따라 이란은 고립됐다. 이란의 새로운 지배계급은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보다 더 강력하게 경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대(對)이라크 전쟁에 쓸 자금도 필요했다. 미국에서 무기와 자금을 지원 받은 이라크 지배자 사담 후세인은 1980년 이란으로 쳐들어왔다.

국가 산업의 막대한 부분이 국유화됐고, 국가가 이를 사기업과 다룰 바 없이 운영했다. 국가 소유 독점기업이 경제를 지배했다.

새로운 복지제도가 등장해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물가를 통제하고 필수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수백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 소유 기업과 결탁한 부유한 지배계급도 새롭게 부상했다.

이라크와의 전쟁은 길었고 파괴적이고 유혈 낭자했다. 양측 모두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란 정부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1988년 종전 이후 이란의 경제를 “개방”하는 자유시장으로 나아갔다.

민영화

이는 민영화 실시, 보조금 삭감, 해외 투자를 위한 경제 개방을 수반했다.

이란 지배계급은 대체로 두 개의 분파로 분열했다. 경제적 변화를 추구하고 서구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개혁파”와 옛 경제와 연관된 보수적인 “강

경파”다.

하지만 민영화된 산업 대부분은 이란 혁명 수비대를 비롯해 국가와 연결된 사람들과 기관들에게 팔렸다.

민영화는 [오히려] “강경파” 출신 대통령인 마무드 아바디네자드 집권 이후 가속화됐다.

이란의 개혁파는 자신들의 개혁이 경제 성장, 더 높은 임금,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라 약속하며 지지를 결집했다. 하지만 이란 지배계급은 부유해졌지만, 평범한 이란 민중은 소외됐다.

노동자들은 보조금과 수당 삭감에



정부가 복지 예산을 크게 깎겠다고 한 것이 많은 이들이 분노한 계기였다

과거 정취한 독립에 이제는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를 더하고 싶어 한다.

이란 사람들은 트럼프의 입국 금지 조치에 상당히 분노를 느낀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의 구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 국가들은 분명 시위를 조종 하길 원한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란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에 자동적으로 어떤 통제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운동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니마 노동계급의 더 큰 부위가 합류할지가 관건이다. 지난 6개월간 이란에서는 버스 운전사, 교사의 시위가 있었다. 돈을 받지 못한 퇴직자들, 은행이 망하는 바람에 돈을 잃은 사람들의 시위도 있었다. 이런 시위들은 같은 분노를 토대로 한다.

문제는 이란인 다수가 아직 시

위에 합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속 주시해야 한다.

마수드 시위는 정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하지만 시위는 완전히 자생적이고 조직 없이 일어나고 있다.

정권은 거대한 억압기구를 동원하고 있다. 시위의 현재 물결은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

정권은 일시적으로 운동을 억압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잠시 동안 운동의 에너지가 소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제 위기는 여전히 존재한다.

지금의 운동이 멈출지라도, 실업자들의 운동과 금융기관 파산에 항의하는 운동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금의 운동은 사람들에게 정권에 맞설 수 있다는 새로운 자신감을 줬다.

인터뷰·정리 닉 클라크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586호 / 번역 김동욱

직면했다. 동시에 완화된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조건을 악화시켰다.

한편 서방과의 관계 “정상화” 계획은 실패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은 더 높은 제재와 대립을 향해 나아가며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그만뒀다.

이란이 중동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이라크와 시리아로 팽창한 것 등은 서방과의 충돌을 불러 일으킨다. 오늘날 이란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과 맺는 약속은 점점 더 무의미해 보인다.

때문에 니마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의회 앞 농성 등 작은 시위들을 벌여 왔습니다. 탄압도 받았습니다.

“지금 분노의 일부는 2013년로 하다가 당선했을 때 품었던, 변화에 대한 높은 기대에서 비롯했습니다. 그의 당선으로 항의 운동이 성장할 공간이 생겼고, 사람들은 이를 활용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닉 클라크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586호 / 번역 김지혜

계속되는 비트코인 버블

비이성적 광기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체제

김종현

비트코인은 수많은 결점에도 현존 자본주의 화폐질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비트코인이 미래에는 ‘대안적 화폐’로 널리 인정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자, 비트코인 시세는 급속히 오르기 시작했다. 물론 애당초 비트코인이 현재 경제 질서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기대부터가 과장된 것이었지만(관련 기사 ‘비트코인 열풍: 투기에 그칠 것인가, 자본주의의 구원투수인가’), 그런 기대치를 감안한다면 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은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치솟았다.

2010년 4월에 1비트코인은 0.14달러도 채 되지 않았으나, 시세가 점점에 이른 지난해 12월 17일에는 무려 2만 달러(약 2160만 원)를 넘기기도 했다. 최근에는 시세가 급등락을 반복한다. 12월 22일에는 하루 사이에 30퍼센트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1만 5000달러 주변에서 시세가 머무르는 중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버블임은 너무 명백하다. 비트코인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오로지 시세 차이뿐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그 어떤 수익도 얻질 못한다. 그래서 더그 헨우드는 미국 좌파 잡지 《자코뱅》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지적했다. “더 전통적인 투기적 자산들과 달리 비트코인의 값어치는 완전히 비물질적이다. 주식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에 근거하고, 채권은 미래의 이자 지불에 대한 청구권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에는 그런 것이 없다. 비트코인의 값어치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쳐줄 값어치일 따름이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각종 금융자산을 ‘가공 자본(fictitious capital)’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은 실제 투자된 생산설비들과 별도로 존재한다. 그러나 주식 소유자들은 투자된 생산수단으로부터 이윤의 일

부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이처럼 미래에 얻게 되는 소득에 기반해 주식 가격이 결정된다. 화폐 자본이 이처럼 미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이윤에 대한 청구권인 금융자산들에 투자되기 때문에 금융 버블이 붕괴한다든지 따위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매우 불안정한 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지적이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배당·이자 등의 형태로 미래의 수입을 청구하지도 못한다. 마르크스가 분석한 가공 자본보다도 어찌 보면 더욱 가공적인 투기 자산인 셈이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버블이 터질 경우 이전의 버블 붕괴들처럼 자본주의 체제를 뒤흔들 만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까? 아직은 그럴 정도로 사태가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시드니 공대 아드리안 리 교수의 조사를 보면,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과 같이 경제 전체를 뒤흔든 버블에는 수조 달러에 이르는 돈이 얹여 있었는데, 비트코인 버블에 얹인 돈은 수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은 현재 약 1000억 달러로, 이는 골드만삭스 시가 총액에 이르는 거금이지만 금융 위기를 일으킬 만큼은 아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버블이 커지는 속도는 대단하지만 역사에는 그보다 더한 버블들도 분명히 있었다. 예를 들어, 투기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버블인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과 지금의 비트코인 버블을 비교해 보자. 튤립 버블의 경우 1635년 9월에서 1637년 2월 사이에, 튤립 구근의 가격이 4개월 만에 무려 2200퍼센트나 상승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올렸다. 이에 반해 비트코인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2017년 8월에서 11월까지 253퍼센트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비트코인 버블이 튤립 버블보다 더 커지면 비트코인 버블의 붕괴는 자본주의 경제에 다소간 타격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비트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끝나

든 비트코인 버블은 분명히 역사를 통틀어 손에 꼽을 만한 ‘비이성적 과열’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 속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 이윤을 위해서 그 어떤 모험도 감수하는 체제 하에서는 그런 과열이 결코 유일무이하지 않다.

비이성적 과열

이렇듯 조금만 들여봐도 비이성적 과열이 분명한 비트코인 투기 버블에 왜 너도나도 열광할까?

심지어는 수능이 끝난 고3 교실에서도 학생들이 비트코인 시세를 시시각각 본다 고 한다.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암호화폐를 참칭한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기 사건은 한 고등학생이 수백만 원을 벌려고 일으킨 조작극이라고 한다. 대체 왜 모두가 이런 광기에 중독된 마냥 뛰어드는 것일까? 심지어 일부는 불법 행위에 뛰어들기도 한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앱 사용자는 18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 30대가 32.7퍼센트로 가장 많고, 10대와 20대도 무려 30.5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한다. 최근 비트코인 투기에 뛰어든 청년들을 취재한 기사들에서 이런 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쌓아 놓은 것도 없고 공부한 것도 없지만 코인은 감각과 운만 있으면 ‘흙수저 탈출’이 가능하다.”

최근 일부 회복이 감지되긴 하지만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서 근본적으로 헤어 나오지를 못하고, 여전히 불평등과 실업은 만연하다. 그러니 자연스레 노동자와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들 중 적잖은 수가 비트코인 거래와 같은 거대한 도박장에 뛰어들어 일확천금을 노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투기적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비이성적 과열도 조장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험한 도가니 속으로 끌어들이는 불합리하고 비도덕적인 체제다. 우선 순위가 이윤 중심에 놓여 있는 체제를 뒤엎어야만 이런 비이성적 과열이 반복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이베이트 제공



서평 | 《난 네 편이야》 (심상정, 인플루엔셜, 316쪽, 14,800원)

누구와 함께, 어떻게 변화를 이룰 것인가

김지윤

얼마 전 심상정 의원의 자서전 《난 네 편이야》가 출간됐다. 그는 책 제목의 “네 편”은 변화를 염원하고 조직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했다. 이 책을 읽어 보면, 노동자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심상정 의원이 인기를 끄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꽤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표적인 여성 진보 정치인이다. 그는 2004년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노회찬 의원과 함께) 진보 정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3선을 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1987년 이래 진보 정당 후보로는 역대 최다 득표(200만 표)를 했다. 대선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내 걸고, 전통적 우파 정치인 홍준표의 노동자 고임금 비난에 “도지사하고 비슷하게 받으면 안 되냐?”고 일갈하던 모습에 속 시원해 한 사람들이 많았다. 동성애 반대를 선언한 문재인과는 달리 1분 발언에서 성소수자를 적극 옹호한 것도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책은 과거 노동운동과 민주노동당 초선 의원으로 국회의 관행에 당황하거나 분노했던 일 등을 그리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1996~1997년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을 거쳐서 김대중 정부 시절 정리해고제를 경험하면서 ‘노동운동만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구나’를 느꼈다고 솔화한다. 그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 대다수의 생각이기도 했다. 산별노조와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양 날개 전략을 경험적으로 진술한 이런 생각은



2017년 5월 1일 메이데이 집회에 참가한 심상정 의원

1999년 민주노동당 창당으로 이어졌다. 노동운동에서 정치의 필요성을 자각한 것은 진보였는데, 물론 이때 정치의 혁명적인 것이 아니고 개혁주의적인 것이었다.

그런 개혁주의 정치의 구현체는 “평등한 복지국가” 건설이다. 심 의원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보는 참여정부의 개혁보다 더 강력한 저항을 불러올 것 ... 그 저항의 크기를 감당할 수 있는 비전과 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 저항과 맞설 수 있는 국민의 거대한 지지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실제적인 개혁을 위한 정치적인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 고민을 했다.”

이것은 심상정 의원의 개혁 프로그램이 참여정보보다 더 급진적임을 표

방하는 것이다.

집권을 목표로 하는 대중정당

그런데 그가 노동자 권리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방식은 그것이 기업주들에게도 이로운 것이라고 설득하는 방식이다. 노동자 계급의 이익과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전형적인 사회민주주의적 접근법인 것이다. 이것은 흔히 국민 또는 국익으로 표현된다. 진보 정당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지하지만,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이 박근혜 퇴진 촛불 초기에 대한상공회의소(기업주 협회 중 하나)에 가서 한 말이 이런 정치를 간결하게 표현한 것일 것이다.

“정의당이 친노동은 분명하지만 반기업은 아니다.” 그는 이미 2005년도 벤처 기업인들 앞에서 똑같은 말을 한 바 있다.

이런 정치가 노동자 투쟁에서 계급간 중재자 구실로 나타난다. 그가 현대차 임원과 나눈 대화라고 인용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현대자동차가 앞장서서 산별 교섭을 수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의 입장에서 득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 합리적인 협상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파업도 줄어들 겁니다.”

물론 그는 정권과 자본이 일방으로 밀어붙인 노동 개악에는 반대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주들이 [‘공통의 더 큰 목적을 위해’] 노동자들을 파트너로 인정하는지부터가 의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본주의에서 노동과 자본은 “공통의 더 큰 목적”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자본주의는 노동자 착취에 기반하므로 자본가들의 이익과 노동계급의 이익은 근본에서 충돌한다. 그래서 국(민)의 이익은 현실에서 지배계급의 이해관계 관철로 나타난다. 바로 이 점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전략은 모순에 처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 모순이 첨예해지는 경제적·정치적 위기의 시기에 더욱 그렇다.

1970년대 이후 서구의 많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신자유주의를 수용했고, 대중의 환멸을 자아냈다. 그가 롤 모델로 삼는 스웨덴 사민당도 본질적으로 다른 사회민주주의 정당들과 비슷한 길을 걸었다. 근래에는 그리스에서 좌파 개혁주의 정당인 시리자가 집권했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주주의 정당들이 신자유주의를 수용했고, 대중의 환멸을 자아냈다. 그가 롤 모델로 삼는 스웨덴 사민당도 본질적으로 다른 사회민주주의 정당들과 비슷한 길을 걸었다. 근래에는 그리스에서 좌파 개혁주의 정당인 시리자가 집권했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친북당, 민주노총당

그는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에 대해 “친북당, ‘민주노총당’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누적”됐고, 이런 “낡은 것들과의 이별”을 추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 의원은 당시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2006년 노무현 정부가 탄압한 “일심회 관련 당원들을 제명”하는 ‘혁신안’을 제출했다.

‘일심회’ 사건은 노무현 정부가 민주노동당 내 자민통계 일부 활동가들이 북한 당국과 접촉했다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 사건이었다(나중에 법원은 일심회의 실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일심회’ 당원 제명 안건은 단지 친북 노선 비판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의한 마녀사냥에 굴복한 것이었다. 훗날 그는 이를 두고 “헌법 안의 진보”라고 명명했다. 심 비대위의 ‘혁신안’은 당대회에서 부결됐다.

그는 2008년 자신의 민주노총당 탈퇴론이 민주노총과 결별하자는 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 1~2년간의 행보에서 보듯이, 그는 조직 노동운동

상층에 기반을 두고자 애써 왔다. 지난해 말 11년 만에 부활한 정당후원금 모금에서 정의당은 7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았는데, 심상정 의원은 노회찬 의원, 이정미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이 있는 전국 작업장을 부지런히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

그의 민주노총당 탈퇴론은 진보정당이 노조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일체화돼 조직 노동운동의 부정적 측면까지 받아 안는 것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이는 사회민주주의의 정경 분업 전략을 제기한 것이었다. 정치(주로 선거나 의회 활동을 뜻한다)는 개혁주의 정당이 맡고, 노동조합은 경제(주로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를 담당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조합 투쟁에서 정치를 제거해 노동조합 부문주의를 강화하고,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계급투쟁에 거리를 뒀던 의회주의 전략을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

연합정치와 책임정치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투표를 며칠 앞두고 심 의원은 유시민 지지를 호소하면서 후보에서 사퇴했다. 그는 당시 진보 개혁 지지층에서 ‘반MB 야권연대’ 염원이 컸다는 이유를 든다. 특히 민주노총 경기본부의 압력이 컸다고 했다. 그런데 그의 사퇴를 두고 진보신당(당시 심 의원의 소속당)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민주노총에서도 유시민처럼 신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는 자유주의 세력과 연합하는 것은 노동자 운동의 대의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이 상당했다.

그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 원하지 않았지만 세력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선택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인 계급 연합이 필요했다고 주장한다.

“과감하게 기존 정당인 민주당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국민들 열망에 부응하는 모습을 앞장서서 보여 주었다면 진보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그는 2년 뒤, 자민통계가 주도하던 민주노동당, 친노 유시민의 참여당과 통합했는데 이를 두고 “진보의 오른쪽과 왼쪽이 만나는 의미”라고 평가한다. 이런 합당은 연립정부 구상에 대한 그의 의지와도 맞닿아 있었다.

그러나 노동계 진보정당이 하위 파트너로서 부르주아 세력과 동맹(연립정부)하면 부르주아 개혁 정부가 노동계급과 천대받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옹호할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 국가나 의회는 심상정 의원이 강조해 온 촛불 염원을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이 못 된다.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입에 올리며 (불충분하나마) 적폐 인물들을 수사선상에 올리는 것 등은 강력한 촛불 투쟁의 여파가 있기 때문임을 봐야 한다. 바로 대중의 자기 행동이야말로 변화를 조직하는 힘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배신과 타협에 대해 원칙 있게 비판해야 부르주아 개혁주의가 위기를 겪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을 노동자 계급과 파업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_____

선택 휴대전화번호 _____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인력 감축, 알바 전환에 맞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연대를 확대하자

연은정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1월 2일부터 여러 대학들이 청소·경비 퇴직자 자리를 채우지 않고 단기 알바를 투입하거나, 일부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의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대학 당국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울산대에서도 노동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등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대학에서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노동조합이 없거나 약한 대학에서는 소리 소문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학교 당국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2017년 서경지부 노동자들이 수개월간의 투쟁으로 따낸 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지난해 임금 협약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액이 당연히 늘어함에도, 대학들은 인건비 총액은 그대로 둔 채 인력을 줄이거나 퇴임자 자리에 더 열악한 단기 알바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상승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 대학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공격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상여금, 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인상 효과를 약화하는 논의를 진행하자, 개별 사용자들도 임금 억제 방안을 밀어붙일 자신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대학 당국들은 “등록금이 계속 동결 [또는 인하]되고, 임금이 대폭 인상돼



적립금을 수천억 원 씩 쌓아둔 사립대학들이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분 몇 백 원을 아끼겠다고 해고·일자리 감축·노동강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에 ‘돈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현재 인력 감축을 시도하는 대학들의 적립금은 수천억 원에 이른다. ‘현금 부자’라고 불리는 홍익대의 적립금은 2017년 기준 7430억 원으로 전국 사립대 중 1위다. 3위 연세대, 5위 고려대도 2016년 기준 각각 5209억 원, 3437억 원이나 된다.

〈조선일보〉는 투쟁하는 노동자들 때문에 단기 알바 노동자들이 되레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이 적립금을 사용해 좋은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지 않는 게 문제다. 〈조선일보〉는 적립금을 사용하라는 주장에 대해 “적립금 대부분은 장학금 용도로 기부 받은 것”이라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적립금의 많은 부분은 펀드·주식 등에

투자되고 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우선 순위의 문제인 것이다.

연대

몇몇 대학의 노동자들은 시간제 알바를 막기 위해 노동자들이 건물 안팎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학생들도 연대하고 있다. 고려대·연세대에서 새벽 5시 30분부터 진행된 피켓팅에 여러 학생들이 새벽같이 일어나 참가했다. 학교 당국과 용역업체가 알바 투입을 시도해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노동자와 학생들이 단호하게 막아 서자 그 시도는 실패했다.

1월 8일, 9일 각각 연세대 정문과 고려대 정문에서 열린 학생 연대 기자회견은 많은 단체들이 참가해 성공적으

로 진행됐다. 홍익대 학생들은 노동자들과 함께 1월 12일 오후 1시 노동자 학생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투쟁을 지지하는 개인·단체들의 연명(bit.ly/청소경비투쟁지지)를 계속 받고 있고, 지금도 참가 학생·단체가 늘고 있다.

대학 정규직 노동자들도 연대했다. 1월 9일 고려대는 신축 건물 기공식을 찾은 총장에게 항의하러 온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막으려고 교직원들을 대거 동원하려 했다. 하지만 대학노조 고려대지부가 앞장서서 교직원들을 모두 해산시켰다!

2017년 두 차례 단호한 본관 점거 투쟁을 한 바 있는 이화여대 노동자들은 1월 2일 첫날 바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학교 당국은 경비 노동자들을 해고하

지 않겠다고 약속서를 썼다. 그래서 다른 대학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투쟁을 파업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제기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공격이 대학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데 큰 기여를 해 왔던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은 많은 노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이 투쟁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

이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폭넓게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인력 감축 반대, 단기 알바 투입 반대, 적정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제주 영리병원, 규제프리존 ...

의료 민영화 못 버리는 문재인 정부

장호중

1월 9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해 만들어진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은 현재 개원을 앞두고 제주도지사 원희룡의 최종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원희룡은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부터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허가를 여러차례 미뤘다. 그런데 문재인도 원희룡의 ‘협의’ 제안에 묵묵부답이다.

이런 쌍방 꼼수가 벌어지는 것은 악화되는 여론 때문인 듯하다. 이미 제주도민의 70퍼센트가 제주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 투자 의혹과 병원이 포함된 헬스케어타운 사업에서의 분양 사기 의혹 등이 제기됐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처럼 여론이 나쁘니 원희룡은 문재인 정부에 공을 떠넘기거나 적어도 책임



영리병원은 문재인인의 또다른 뒤통수치기가 될 것인가

을 분산시키려 하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가 제주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게 아님을 원희룡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이 의료영리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도 개원 자체를 막지는 않고 “면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제주의 소리〉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제주

도에 영리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처음 허용한 것도 (문재인이 계승하려는) 노무현 정부다.

노무현 정부는 2002년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병원 설립을 허가했다. 2005년에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 병원이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이 때 영리병원을 허용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아예 국내 병원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려 했지만, 2008년 거대한 촛불 운동에 부딪혀 포기했다.

그 뒤로도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만들려는 시도는 계속됐지만 반대 운동에 부딪혀 여러차례 중단됐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아래서 원희룡이 중국계 자본을 끌어들이려 기어이 병원을 세우는 데 성공한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녹지국제병원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문을 열 예정이었는데 박근혜가 임기 도중에 쫓겨나면서 문재인 정부가 뜻하지 않게 최종 결정권자가 된 셈이다. 문재인은 집권 후 원희룡의 ‘협의’ 제안에 묵묵부답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미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일 ‘위안부’ 합의 유지, 한상균 석방 외면 등에서 보듯 문재인 정부가 촛불 대중의 바람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추측컨대, 문재인 정부는 침묵을 지킨 채 원희룡의 결정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하려 할 듯하다.

노무현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문재

인도 의료를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만들려는 국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 그 속도와 방식에서 이명박근혜 정부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방향이 다른 것은 아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하에서 민주당이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한 까닭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은 의료 민영화 법으로 알려진 규제프리존법도 일부 내용과 형식만 바꿔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지역 개발을 강조하는 법이니만큼 지방선거 전에 통과시키려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쟁점 개선하는 데 그친 ‘문재인 케어’도 의사협회의 반발을 핑계로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일부 NGO 등의 시도는 문제다. 문재인 자신이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처럼 배신을 정당화해주는 구실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독립적인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

